

한수원, 한빛원전 수명연장 위해 주민 회유 '논란'

1·2호기 방사성환경평가서 초안 공람률 높여 주민에 선물세트 지급 “한수원 직원이 지역 공무원 행세하며 대필 서명도”...공정성 훼손 지적 영광·고창 농민들, 직원 개입 규탄...한수원측 “찾아가는 공람행사 일환”

정부가 영광 한빛원전 1·2호기 수명연장을 밀어붙이고 있는 가운데 지역민들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방사성환경영향평가서에 최신 기술을 적용해달라는 요구를 묵살한 한수원이 지자체 주민공람 기간이 끝나는 시점에 원전 수명연장을 위해 주민들을 회유했다는 논란이 일고 있다. 절차상 원전을 1~2년간 가동중지 상태로 뒀다가 수명연장을 하는 것이 안전하지에 대한 의문도 제기 되고 있다.

◇ 수명 연장위해 회유 나섰다 = 영광과 고창의 농민들이 22일 영광 한빛원전 앞에서 '지자체 공람 당시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 직원의 개입을 규탄한다'며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농민들은 “고창과 영광 등에서 한수원 직원들이 지역 공무원인 것처럼 주민들로부터 대필 서명을 받았다는 의혹을 제기하면서 주민 의견 수렴 절차의 공정성이 훼손됐다고 주장했다.

또 주민들의 공람참여율을 높이며 수명연장에 찬성을 유도하기 위해 선물세트를 지급했다고 주장했다.

한수원은 한빛원전 1·2호기 수명연장을 위해 원자력안전법에 따라 방사선 비상계획구역(한빛원전 반경 최대 30km)에 있는 6개 지자체(영광·함평·고창·부안·무안·장성 등)에 평가서 초안을 제출하고 주민 공람 절차를 진행했다.

현재 5개 지자체는 주민공람이 마무리 됐고 합평이 다음달 3일까지 진행중이다.

농민들은 지난달 18일을 시작으로 이달 17일까지 진행된 고창군 주민공람회에서 한수원 직원들이 김 선물세트 등을 들고 마을을 돌며 주민들에게 초안 내용을 설명하면서 회유를 했다고 주장했다.

주민들로부터 대필 서명을 받고 확인서에는 담당직원의 가짜 서명까지 작성하기도 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한수원 측은 “대필서명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면서 부인했지만, 선물세트 제공은 인정했다.

다만, 찬성 회유목적이라는 주장은 일축하며 ‘찾아가는 공람장’의 일환이었다고 해명했다. 주민들이 이해하기 어려운 초안의 내용을 설명하기 위해 한수원 직원들이 직접 찾아가는 과정에서 빈손으로 갈 수 없어 김 선물세트 등을 들고 간 것이라는 설명이다.

같은 선물세트를 영광지역 주민공람시에도 제공하려 했으나 영광군이 반대해 하지 못했지만, 함평군은 반대하지 않아 제공했을 뿐이라는 것이다.

하지만 지역민들은 “노인들에게 선물세트를 주고 공람 참여율을 높이기 위한 눈속임일 뿐”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한빛 1·2호기 수명연장 안전인가- 한수원은



영광과 고창의 농민들이 22일 영광 한빛원전 앞에서 '지자체 공람 당시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 직원의 개입을 규탄한다'는 내용의 기자회견을 열었다. <고창군 농민회 제공>

수명연장에 나선 한빛원전 1·2호기 수명연장 가동시점을 2027년 6월로 잡았다.

수명연장을 앞두고 남은 절차 등을 고려한 것이지만 지역민들은 안전성에 의구심을 표하고 있다.

주민공람을 앞두고도 최신기술 적용과 중대사고를 가정한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를 요구했지만 수용되지 않은 상황에서 추후 수명연장 단계에서 한수원이 주장하는 안전성을 믿지 못하겠다는 것이다.

한빛원전 1·2호기는 각각 2025년 12월 22일, 2026년 9월 11일 설계 수명이 만료된다.

한빛 1·2호기 수명연장 절차를 진행하려면 방사성환경영향평가서 주민공람에서 지역 주민 30인 이상 주민공청회를 신청하면 공청회를 열어야한다.

영광의 주민공람 결과 19세 이상 영광군 거주민 4만 4643명의 대상 중 10.1%(4526명)이 방사선 환경영향평가서를 공람했다.

영광군 등에 따르면 지난 1월 25일부터 3월 25일

까지 60일간 실시된 주민공람 결과 총 710명이 공람 후 의견을 제출했다.

총 414명이 공청회를 요청했고 지역주민 의견을 반영하고 안전성을 최우선으로 해달라고 166명이 의견을 냈다. 수명연장 반대와 최신기술 확인 요청 등으로 50건의 의견이 제출됐으나 계속 운영을 희망한다는 의견은 75건에 불과했다.

이에 함평군의 주민공람이 끝나는대로 5월 중에 공청회를 개최할 전망이다.

함평과 고창은 각각 20건, 부안은 7건 공청회 신청이 접수됐다. 주민신청 수가 미달된 함평, 고창, 부안은 원자력안전법에 따라 지자체장의 의견으로 공청회를 열 계획이다.

결국 모든 지자체에서 공청회를 거칠 것으로 예상된다. 공청회 이후 한수원은 주민 공청회에서 접수된 주민 의견을 바탕으로 원자력안전위원회(원안위)에 주기적안전성평가(PSR)와 운영변경허가신청서를 제출한다.

이후 원안위는 주민의견이 담긴 운영변경허가신청서 내용 등을 검토한다. 검토 기간은 수정·보완 등이 이뤄지는만큼 2년여가 걸리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공청회에서 주민들의 반발이 거셀 것으로 예상돼 남은 일정에 차질이 빚어질 것으로 보인다.

김용국 한빛원자력안전협의회 위원장은 “한수원은 공람 시행 전 주민들이 요구한 최신 기술기준 적용, 주민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설명 등의 보완 등을 요구할 때는 무성의한 태도로 일관해놓고 재가동 목표 시점만 정해놓고 안전성을 믿으라고만 한다”면서 “일정을 맞추기 위해 급급한 한수원의 안전성 주장을 믿을 수 없다”고 말했다.

/김대기 기자 kdi@kwangju.co.kr

흉폭해진 강력 범죄...생명 위협받는 경찰

광주 경찰 잇따르는 부상에 공포탄·레이저건 제압 빈번

광주 지역에서 발생하는 강력 범죄가 갈수록 흉폭해지면서 경찰이 부상을 입거나 공포탄, 레이저건을 쏘 제압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22일 광주경찰청에서는 112 상황실에 협박 전화를 하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흉기를 들고 위협한 50대 남성 A씨를 레이저건을 쏘 제압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A씨를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구속했다.

레이저건은 용의자를 제압하기 위해 전극(電極) 점을 발사하는 권총형 전기충격기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일 새벽 12시 10분께 광주시 광산구 송정역 인근 숙박업소에서 경찰관 4명에게 흉기를 휘두르며 위협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술에 취한 채 112 상황실에 전화해 “지금 광산경찰서에 갈건데 세비 걸면 죽인다”고 협박 전화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숙박업소에 머물던 A씨는 근처에 있는 흉기를 들고 경찰과 대치했다. 경찰은 “흉기를 내려놓으라”고 회유했으나, A씨가 강력하게 저항하자 결

국 레이저건을 쏘 A씨를 제압했다.

앞서 지난 19일 오후 5시 30분께에는 광주시 남구 송암동의 한 도로에서 B씨가 흉기를 휘둘러 출동한 경찰 3명에게 중경상을 입혔다가 레이저건을 맞고 제압됐다.

경찰은 총기로 허공에 공포탄 2발과 실탄 2발을 발사했으나 B씨는 저항을 멈추지 않았고, 결국 레이저건을 쏘 제압했다.

출동한 경찰 3명중 여경 한 명이 괴한이 휘두른 흉기에 얼굴 등을 크게 다쳐고, 다른 경찰관 2명도 흉기에 찔려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광주의 일선 경찰관들은 강력한 제압 수단을 활용한 검거 방식이 더욱 활성화돼야 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흉기난동 등 불특정 다수를 위협하는 강력범죄가 늘어 경찰관의 생명까지 위협하는 사례도 빈발하고 있기 때문이다.

한 지구대 경찰관은 “22일 오전에도 지구대에서 ‘항상 피습에 대비하라’는 취지의 교육이 이뤄졌다”며 “지난 2021년 인천 증간소음 흉기난동 사건



윤희근 경찰청장이 22일 피의자 검거과정에서 부상을 입어 광주시 한 종합병원에 입원해 있는 광주남부경찰 지구대 소속 여경을 찾아 위로의 말을 전하며 격려하고 있다. <광주경찰청 제공>

이후 일선 경찰관들은 피습에 대처하기 위한 훈련을 철저히 해 왔다”고 말했다.

이어 “최근에는 흉기난동 현장에서 경찰관이 경고를 하기도 전에 흉기를 휘둘러 경찰관의 생명이

위협하는 경우도 잇따르고 있다”며 “경찰관이 위급한 순간 신속하게 조치하고 대응하는 여건이 마련돼야 한다”고 밝혔다.

/유연재 기자 yjyou@kwangju.co.kr

불륜 남성과 짝은 성관계 영상 남성에 아내에게 보낸 여성 벌금형

20대 여성이 불륜남성과 짝은 성관계 영상을 남성의 아내에게 전송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 9단독(판사 전희숙)은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반포 등), 상해, 재물 손괴, 폭행 혐의로 기소된 A(여·26)씨에 대해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재판부는 A씨에게 40시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도 부과했다.

A씨는 지난해 6월 남성 B(35)씨와 한달간 촬영한 성관계 영상을 SNS메신저를 이용해 B씨의 아내에게 전송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지난해 5월 A씨의 주거지에서 B씨 소유의 휴대전화를 뺏으려 썬다움을 하는 과정에서 B씨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리고 팔을 물어 상해를 가하고 B씨 휴대전화 두 대를 망가뜨린 혐의로도 재판을 받았다.

재판부는 “A씨가 초범이고 범행을 반성하고 있다”면서 “A씨는 성적 수치심을 유발 할 수 있는 촬영물을 피해자 B씨의 의사에 반해 제공했다”고 지적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제안하면 거절하고!

발견하면 신고하고!

한사람의 보험비로 전국민의 경제부담 줄

보험사기 ZERO

- 고의로 보험금을 노린 생명·신체 훼손 행위 NO!**
- 허위 사고, 허위 진단, 과다 입원 행위 NO!**
- 브로커를 통한 환자 소개·알선·유인 행위 NO!**
- 고의 교통사고, 차량 수리비 과다 청구 행위 NO!**

신고 방법

금융감독원 콜센터
국번없이 1332 ▶ 4번 ▶ 4번

각 보험회사 대표번호

금융감독원 홈페이지
www.fss.or.kr ▶ 보험사기 신고

각 보험회사 홈페이지
보험범죄신고센터

처벌 사항

10년 이하 징역
5천만원 이하 벌금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적용)

신고 포상금

적발 금액에 따라
최대 10억원 지급

경찰청
 금융감독원
 h-well 국민건강보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생명보험협회
 손해보험협회
 IAA 한국보험대리점협회